

32년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여전히 반쪽

인사·감사·예산권 등 무늬만

역량 강화 정책지원관 하세월

지방의회법 제정 등 보완책 시급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 돼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령기관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인사권은 여전히 반쪽인 데다 집행부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예산과 감사 기능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도입도 제자리를 맴도는 등 허울뿐인 지방의회 독립을 보완할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인 지난해 개정돼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자는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지자체에서 의회로 넘기는 것으로, 각 지방의회들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무처 기능을 재정립했다.

사실상의 첫 시험대는 민선 8기와 함께 이달부터 새로 출범한 9대 시의회와 12대 도의회로,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종속됐던 상당 부분들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무처 직원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권한이 의장에게 넘어간 인사권부터 집행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불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시의회 인력은 사무처장인 2급 이사관과 4급 서기관 9명, 5급 사무관 8명 등 총 80명이다. 사무처장 밑으로 3급인 부이사관 대신 4급 담당관 체제인 탓에 자체 승진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1급인 서울시의회와 2급인 부산시의회를 제외하고 광주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의회 사무처장 자리는 2급 내지 3급 부이사관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4급이 승진해 사무처장직을 맡은 전례는 없다. 수직 승진체계가 없을 뿐더러 사무처장의 직급을 상향해 집행부와 의회급수 차이를 맞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더딘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의회의 인사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다.

당장 이달 중순께 단행될 4급 이하 인사를 두고서도 도청 소속 서기관 5명이 도의회 전출 희망서를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도청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4급 간부는 2명뿐인 상황이라 뒷말만 무성하다.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도 서기관급 2명이 도청으로 가려고 했으나, 도의회로 가기를 원하는 도청 간부가 없어 인사 교류가 무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해 의회 사무처장을 1급으로 조정하고 3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인사 개편안을 행안부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조직권이 없어 인력 증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예산편성권도 독립되지 않아 의회 예산은 여전히 집행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상경비 예산책정마저도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 예산 담당자를 찾아 읍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예산은 집행부 예산 배정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직원 정원도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된다”며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행부의 하위기관으로 남아있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 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시·도교육청으로 한정할 뿐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자체 감사기구 설치가 불가능하다 보니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 감사관이나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도 하세월이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이라는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오선우 기자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9대 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정무창...부의장 심철의·이귀순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창 의원(59·광산2)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재선의 같은 당 심철의 의원(48·서구4)과 이귀순 의원(43·여·광산4)이 각각 당선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정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재적의원 23명이 투표해 찬성 23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의장에 당선됐다.



정무창



심철의



이귀순

정 의장은 목포대 법대 출신으로 직전 8대 의회에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민주당 광주시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정 의장은 “시민의 삶과 생활을 우선에 두는 민생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협업하는 의회, 청렴한 의회, 연구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고, 의회의 높아진 위상과 권한 만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귀담아 듣는 품격있고 능력 있는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심 의원과 이 의원이 나란히 18표와 22표의 과반 찬성표를 얻어 각각 제1, 제2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논의를 거쳐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문화 등 4개 상임위별로 5~6명의 위원을 배정했고, 상임위원장은 오는 15일, 운영위원장은 오는 21일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내년 광주서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70여개국 참석...마이스 도시 도약

내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이사회에서 유치 경쟁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접전 끝에 광주가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1955년 개최 이후 올해로 67회째를 맞는 기업인과 산학기업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서울시가 2009년 개최한 이래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두 번째이다.

내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0여개국 1,000여명의 국내·

외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대회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 맞춤형 비즈니스 회의와 각종 포럼, 기업 전시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광주 홍보는 물론 전 세계 산학관계자와 지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교류중소기업 수출 증대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하이랜드(주)



(주)누리산업개발



(주)나로디엠씨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1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